

工業發展法제정 내년 施行

기존 7개工業육성법폐지 一元化

政府는 國內工業構造의 합리화를 促進하기 위해 現行法上의 각종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업종중심의 政府支援方式을 기능중심으로 전환, 유치산업육성과 사양산업합리화·생산성향상사업을 중점지원하는 工業發展法案을 마련, 이번 定期國會 議決을 거쳐 내년부터 施行키로 했다.

琴震鎬상공부장관은 지난 9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工業發展法の 구상은 우리의 經濟發展段階 및 경제운용기조에 발맞추어, 산업의 효율적 發展可能性과 최적성장경로의 선택가능성을 극대화하는 制度的 전환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強調했다.

전문 29條 부칙 8條로 된 이 法案은 종래의 機械工業振興法·조선工業振興法·電子工業振興法·鐵鋼工業育成法·非鐵金屬製鍊事業法·石油化學工業育成法·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 등 7個 法律을 폐지, 一元화시킨 것이다.

科學技術革新促進法案 마련

기술형中小企業 50% 所得 공제키로

政府는 2000년대 技術先進國 進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장치로서 「科學技術革新促進法」(案)을 마련했다.

科學技術處에 따르면 이 科學技術革新促進法(案)은 60년대와 70년대에 각각 제정된 현행의 「科學技術振興法」과 「技術開發促進法」을 統合·補強하여 과학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連繫·促進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기술우위정책을 명문화했는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분야별로 과학기술진흥中長期계획을 수립·시행하며 科技處는 이를

토대로 科學技術振興 中長期綜合計劃을 樹立·施行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新技術 事業投資會社(벤처캐피탈社)는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의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社債를 發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의 科學技術革新을 선도할 전략기술을 중점개발기 위한 國策研究開發事業을 汎部處의 차원으로 확대시키도록 했는데 國策研究開發事業의 대상분야는 資源·에너지·食糧·環境·海洋 등 公共福祉技術分野·精密電子·光통신·生命工學 등 尖端產業技術分野, 金型 등 產業基盤技術分野, 엔지니어링·電子計算조직 이용기술 등 시스템기술분야 등으로 결정했다.

이 法案에서는 國民經濟에 있어서 政府投資機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 매출액의 일정률을 技術開發計定에 돌려 운용토록 하는 한편 企業相互間, 企業과 大學 및 研究機關間 國內企業과 海外企業間의 協同研究를 支援토록 했다. 그리고 支援對象企業研究所의 범위를 종래의 企業附設研究所에서 독립된 法人研究所와 海外研究所까지 확대하고 기술개발관련준비금, 특별감가상각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상의 종합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그밖에 이 法案에서는 政府 및 金融機關의 출연금으로 技術信用保證基金을 설치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후 6年間 소득의 1백분의 50을 공제해 주도록 했다.

「부다페스트條約」加入검토

業界 『현단계선 時機尙早』 주장

政府는 微生物 寄託에 관한 國際條約(부다페스트條約)가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政府는 微生物寄託에 따른 國際條約加入 중간조치로 微生物을 이용한 發明特許出願에 관한 國內寄託節次를 완화한데

이러 부다페스트條約 加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은 지난 7月初 워싱턴에서 열린 第4次 韓美경제협의회 工業所有權分科委員會에서 韓國에 대해 微生物國際寄託에 관한 條約에 조속히 加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이 같은 美國의 부다페스트條約 加入要求에 대해 韓國의 加入時期는 국내 寄託機關 1個가 國際寄託機關으로 지정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 국내 寄託機關으로 지정되어 있는 KAIST의 기능을 國際寄託機關 수준으로 확대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業界에서는 대부분의 國際協約이 기술선진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이 완벽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현단계에서 부다페스트條約에 加入할 경우 외국의 國內출원을 조장, 早期개발을 스스로 불러들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 強力한 반발을 하고 있다.

美, 유전공학관련 特許

우선권인정 신중 建議

유전공학연구組合 특허대책 소위 통해

遺傳工學研究組合(이사장 鄭周永)은 최근 特許對策小委를 열고 외국의 特許出願에 대비해 特許出願公告이전에 出願의 정당성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우선권 인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特許當局에 建議하기로 했다.

이번 小委에서는 特許制度가 特許法 第1條에 의거,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美제네테크社의 特許出願에 대해서도 美國측이 特許權을 인정하지 않은 遺傳工學技術(세균숙주의 형질전환에 적합한 재조합클로닝비클레제법)이 있음을 증시, 제네테크社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컴퓨터研究組合 발족

퍼스널컴퓨터 등 共同開發 추진

電子工業振興會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컴퓨터研究組合이 國內 20個會社를 組合員으로 發足했다.

▲컴퓨터시스템의 수출증대 ▲외국기업 국내 진출 및 輸入自由化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업육성 ▲보급기종간의 호환성 제고 및 情報 활용증대와 소프트웨어산업 집중육성 ▲핵심부품개발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 ▲政府支援策의 효율성제고 등 국내컴퓨터산업 종합육성을 목적으로 발족된 이 組合은 앞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표준화는 물론 퍼스널컴퓨터 등 韓國型 독자모델을 共同開發, 外國機種에 적극 대처케 된다.

韓國 소프트웨어 研究組合 設立

知的所有權 法的保護 등 研究

韓國소프트웨어開發研究組合(이사장 朴炳哲)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知的所有權의 세계 동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研究를 수행키로 했다.

소프트웨어開發研究組合에 따르면 李京煥 中央大교수팀이 맡을 이 연구사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그 제품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소프트웨어의 法的保護를 위한 기본적인 方案을 제시하게 된다.

이 研究에서는 特許權 商品權 著作權 契約權에 의한 보호방안을 외국의 소프트웨어개발권과 비교하고 국내의 다른 類似製品에 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오>